




제5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1

#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박 찬 무 협동처장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박찬무 협동처장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1. 자활의 딜레마?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공동체를 배출한다. 스스로 활성화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활공동체를 흔히 자활사업의 꽃이라고 얘기한다. 그 안에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자립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빈민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자조적이고 자립의 조직체를 건설하기 위한 가치지향이 제도화 되어 현재의 자활공동체로 투영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터인데 과연 지금 자활진영은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2000년 기초법 시행을 계기로 자활은 제도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정부미를 여러 해 먹는 동안 애초에 가졌던 가치지향이나 생산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가 되어 버렸다. 자의라기 보다는 평가라는 틀로 강제했던 주무부처의 영향도 컸고 너무나도 다양한 운영주체가 존재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이 가지는 역동성과 실무자들의 헌신성은 이만큼이나 자활진영의 확대를 가져왔다. 빈민운동에서 시작된 지역공동체 건설에 애써왔던 유전자가 자활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자활일꾼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참여주민의 자기주체성발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의 이러한 가치지향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탈수급이라는 근시안적 목표달성이라는 명예를 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향은 저 앞에 있는데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로 인해 자활일꾼들은 소진되어지고 있다.

## 2. 제도개선이나 대정부투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

매년 진행되는 제도개선 의견의 설문들, 하지만 복지부는 끄떡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들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제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법,령 까지 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되풀이되는 상황에 현장일꾼들은 낙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활현장을 떠난다. 활동가라고 칭했던 사람들은 떠나고 그 자리는 사회복지사가 메우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 회계, 영업, 홍보, 마케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여주민과의 신뢰형성 등은 좀 더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일꾼들에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동력은 떨어지고 각자가 지향하는 바의 각도 넓어지고, 고립화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 3.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

발제자가 얘기했듯이 자활은 고유의 가치지향과 정부의 제약에서 항상 긴장한다. 버티다가 지치면 그냥 모 안나는 정도로만 제도속에 안주할수록 지역연대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자활근로가, 자활공동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어디에 판매할 수 있을까? 평가들에 맞춰 되지도 않는 자활공동체를 짚어내고 다시 되돌아오는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기관의 비민주적운영과 나아갈 나침반을 잃어버린 현 상태에서 제도 개선만으로 자활의 목적과 목표는 달성 될 수 있을까? 특별한 부정이 없는 한 센터장을 65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는건 아닐까? 이 불편한 진실속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요구하면 어떨까?

### 4. 이런 상상은 어떨지?

- \* 센터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지역센터가 훈련된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곳이 되는 것은?
- \* 지역센터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센터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현재 모법인에서 인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당사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에서 센터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지역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취약계층 비율 맞추기를 어려워한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서 넘어간 (예비)사회적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 공모로 인해 지정(인증)된 곳들은 상대적으로 건강성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적어도 자활센터에서는 그만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참여자자활학교, 실무자자활학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쌓여진 내공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화된 자활의 장점을 더욱 넓히는 것은 어떨까? 15년간 쌓여온 교육커리큘럼과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적어도 자활에서 교육받고 배출된 주민들은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살찌우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자활센터에 의뢰되는 계층의 확대를 전제로 말이다.

발칙한 상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런저런 빗장이 많이 열려야겠지만 이래도 저래도 제도의 늪 속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실에서 뭔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